

## 자주통일의 길

조국광복60년, 4월혁명45주년 논집 2005

- 발행처 : 사월혁명회
- 발행일 : 2005년 4월 15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 미군주둔과 분단 반세기, 그리고 한국의 현실

노 중 선

(회원, 통일자료실 대표)

## 1. ‘나라’는 무엇이고, ‘국회’는 무엇 하는 곳인가?

23일 한국방송공사의 <추적 60분, 매항리에도 봄은 오는가>를 보고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부끄러울 정도의 치욕감이 들었다. 미군은 우리나라를 위해 주둔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우리를 이용하는 것인가. 우리는 주권 있는 국가인가? 너무도 많은 의문이 생겼다. 국민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정부가 어떻게 정부로 존재한다는 것인가. 주둔군 지위협정에 묶여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우리의 땅을 버젓이 내주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미군을 언제까지 내버려 둘 것인가.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했는가. 45년이란 세월 동안 아파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 한 것은 무엇인가...

한겨레신문 3월 28일자 ‘국민기자석’에 실린 김신동(전북 전주시 거주) 씨의 절규였다.

비록 짧게나마 이 글에는 제나라 땅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이 외국 군대에 의해 까닭 없이 멸시받고 생존권이 위협당하는 현상을 확인하고 난 뒤 그 같은 행패를 자행하는 주한미군에 대한 적개심, 또 제나라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외면 방관하는 정부와 국회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 그리고 끓어오르는 민족적 모멸감까지도 함축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그 동안 ‘혈맹’ 관계라는 미국에 대한 인식을 파쇄하고 최소한 나라로서의 ‘대등한 관계’와 궁극적으로는 ‘미군의 철수’까지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읽는 이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의 분단 반세기는 곧 미군주둔 반세기이다. 우리는 그 동안 미국이 사실상 역대 독재정권을 지속시켜주는 구실을 했다는 점, 그리고 대한민국과 미국간의 관계는 대단히 불평등한 관계라는 점을 인식해 왔지만 주한 미군이 한국에 대해 어느

만큼 국가주권을 침해하고 있고, 한국 국민에 대한 반인권적 행패가 어느 정도로 자심하며, 그리고 미군과 미군부대에 대한 정권 당국의 온갖 특혜조치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가늠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 기회에 그 실태들에 대해 보다 정확히 살펴보고 주한미군 문제의 해결 방법과 민족자주의 길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 2. 미군이 주둔하는 한국의 현실

### 1) 주한미군에 대한 특혜 사례

- **미군공여지 문제** : 미군 공여지는 1945~48년 미군정 때와 1950년 6.25전쟁 때부터 조성되기 시작했는데, 8.15 직후 일본군 무장해제 과정에서 무상으로 접수했던 모든 기지와 시설들에 대한 사용권이 고스란히 미군에게 넘어가 1967년까지 사용하였다. 그리고 1967년 발효된 '한국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규정에 따라 한국정부가 그 사용권을 주한미군 측에 임대료 없이 무기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여한 땅을 미군 공여지라고 말하는데, 그 총면적은 90여 개소 80,289천 평에 이른다. 이는 서울시의 절반이고 인천시의 1.5배에 해당하는 넓이라고 한다.

전체 미군 공여지는 전용지역(미군이 배타적 사용권을 가진 땅으로 미군기지, 사격훈련장, 기타 시설로 쓰이고 있는 41,722천 평), 지역권지역(사격훈련장 안전지대, 송유관·수도관 보호를 위해 확보한 지역 10,263천 평), 임시지역(군사훈련을 위해 임시로 사용하는 땅 28,304천 평)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주한미군 공여지 현황(단위:1,000평)

- ① 서울의 1,110천 평 중 용산기지는 85만 평이다.
- ② 동두천시의 공여지 18,359천 평은 시 전체 면적의 50%가 넘는 지역이다.
- ③ 포천의 4,788천 평 중 미군 다목적 사격장 등 한국정부가 주한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여해 주었던 4곳의 토지 107만여 평이 1999년 12월 반환되었다.

그리고 미공군 장교클럽(381평), 군산통신기지(9,433평), 여주통신기지(563평) 등 10,577평이 최근 실무 차원에서 반환협상이 끝났다고 한다.

위 치	면 적	현재 활용 여부
서울	1,110	시설부지
부산	290	시설부지
대구	1,229	시설부지, 비행장
인천	145	시설부지
광주	379	비행장
대전	17	시설부지
의정부	2,406	시설부지, 훈련장
동두천	18,353	시설부지, 훈련장
과주,문산	28,302	시설부지, 훈련장
포천	4,788	훈련장
오산,평택	3,901	시설부지, 훈련장
기타	19,369	시설,훈련,비행장
합계	80,289	

이를 시가로 환산하면 전용지역 41,722만 평은 10조원이 넘고, 다시 이를 임대료(토지 가액의 10%)로 환산할 경우 연간 1조 3,352억 원에 이르며, 이는 또 1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 임대료만 10조원이라는 것이다.

(한국일보 1997.8.10)

- **주한미군 주둔지원 문제** : 1995~97년 3년 동안 한국정부의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규모는 총 67억 5200만 달러(정부 예산에 의한 직접지원비 10억 8400만 달러, 토지무상공여 혜택 등 간접지원비 56억 7800만 달러)였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1995년 24억 1200만 달러(1조 9298억 원), 1996년 21억 5500만 달러(1조 8081억 원), 1997년 21억 9500만 달러(2조 702억 원)이다. 또한 1997년도의 주한미군 지원 규모는 정부의 일반회계 예산총액 66조 7000억 원의 3.1%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 항목별로 보면 직접지원비는 방위비 3억 6300만 달러를 포함해 총 3억 9814만 달러, 간접지원비는 17억 9721만 달러(임대료 무상혜택 15억 5700만 달러, 조세와 차량통행료 면제 1억 5378만 달러, 훈련장·부두·항만·항공 시설 등 사용료 면제 2650만 달러)이다.

이 같은 액수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훨씬 많은 금액인데 다른 나라들의 주둔미군 지원규모는 다음과 같다.

#### 각국의 주둔미군 지원규모(96년 기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48,800여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제2차대전 전범국인 데다가 병력수로는 주한미군보다 1만 2,000여 명이 많음에도 독일의 미군지원 규모는 13억 원에 불과하다. 일본의 경우도 주일미군 총 지원규모는 45억 8500만 달러로 한국보다 2배 이상 많지만 국내총생산 대비 부담비율로 보면 일본(0.1%)은 한국(0.44%)의 4분의 1에 불과하다(한겨레신문 1998. 11. 23).

그리고 한국군은 군사작전 때만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받는 데 비해 미군 차량

	미군병력	지원 규모
독 일	48,878명	13억 달러
일 본	42,962명	45억 8500만 달러
한 국	36,539명	21억 5500만 달러
이탈리아	12,401명	5억 2800만 달러
쿠웨이트	5,531명	7200만 달러
스 페 인	2,746명	1억 2300만 달러

은 모두 면제되고, 전기사용료도 한국군은 일반용 요율을 적용받는데 비해 미군은 산업용 요율을 적용받아 실제로는 훨씬 저렴하게 전기사용료를 부담하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 미군범죄자 처리 문제 : 미군 주둔 이후 미군범죄가 빈발했거니와 1945년 9월 미군이 남한에 주둔한 이후 1966년까지의 강간, 강도, 살인 등 범죄 발생 내용은 자료마저 남아있지 않고, 1967년부터 1998년까지 발생한 사건을 총합하면 50,086건(연간 1,565건)의 미군범죄가 발생하였고, 범죄에 가담한 미군은 56,904명(연간 1,778명)에 이른다.

**미군범죄자 사건처리 현황**

연도	미군인 범죄건수	재판관할사건수(%)
1985	1,315	6 (0.5)
1986	1,130	6 (0.5)
1987	1,074	5 (0.5)
1988	1,188	6 (0.5)
1989	1,085	8 (0.7)
1990	942	8 (0.8)
1991	932	14 (1.5)
1992	642	10 (1.6)
1993	624	13 (2.1)
1994	711	18 (3.4)
1995	694	41 (5.9)
1996	526	18 (3.4)
1997	543	31 (5.7)
1998	518	20 (3.9)
합계	11,924	204 (1.7)

주한미군 범죄는 폭력, 강도, 절도, 도로교통법위반 등 이외에도 각종 형태로 한국민 살해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 같은 주한미군 범죄자들에 대한 구속률은 1.1%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재판관할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표>에서 보듯이 1985년 이후 1998년까지 미군인 범죄 11,924건 중 재판관할권을 행사한 것은 고작 204건으로 1.7%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미국에 의해 무죄로 처리되거나 가벼운 행정적 징계를 당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미군 범죄자에 대한 한국법원의 재판 관할권 행사가 1.7%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52%, 일본의 32%, 필리핀의 21% 등 다른 지역 주둔 미군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 행사비율을 보더라도 주한미군에게 있어서 남한 땅은 거의 완전한 치외법권적 권리를 누리는 지역이라고 할 만하다(<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 145쪽).

그리고 전국에 단 한 곳 있는 외국인 범죄자 수감 교도소인 천안 소년교도소는 1997년 말 9명, 1998년 말 9명, 1999년 8월까지 4명의 미군 범죄자가 수감되어 있는데 이는 매년 2천 명 가까운 입건 범죄자 중에 고작 10명 미만의 수감자라는 사실만 보아도 미군범죄자에 대한 처벌수준이 어떤가를 짐작케 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신입 소년수 5명이 쓰는 2.8평의 방을 미군 수감자들은 혼자서 쓴다고 하는데 방안에는 침대, 컬러TV와 비디오, 선풍기, 전자오락기, 컴퓨터가 구비되어 있고, 온갖 주방용 기구가 다 갖추어져 있고, 냉장고에는 각종 육류와 채소, 과일 등이 있어 한국의 웬만한 중산층 가정의 부엌보다 나은 수준이라고 한다. 주일미군 범죄자들은 일본인 죄수들과 똑같이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과 비교하더라도 주한미군 범죄자들은 온갖 특혜조치에 의해 편안하고 호사스러운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 2) 인권피해 사례

지난 해 가을에서야 공식적으로 공개된 6.25 당시 미군 폭격에 의한 충북 영동 노근리 양민학살 사실 이외에도 전국 도처 30여 곳에서 무고한 양민 수백 명이 미군 폭격에 의해 살해된 것을 비롯해서 주한미군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는 여러 형태로 허다하게 많지만 여기서는 군산 미군부대에서 있었던 최근의 한 사례만을 소개하고자 한다.

미군 제8전투비행단은 전북 군산의 330만 평 땅을 50년 넘게 무료로 무기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인근 주민들은 소음공해, 미군범죄, 사유재산 무단점유로 인한 손해 등 온갖 피해를 입고 있는 곳이다. 이에 이 지역에서 ‘군산미군기지 우리 땅 찾기 시민모임’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 문정현 신부는 한겨레신문 99.8.11치 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미군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묻고 있다.

...85회 ‘금요집회’가 있던 지난 6일의 일이다. 엄청난 전경이 투입되었다. 미군과의 문제인데 매년 한국경찰이 가로막는다. 저녁 7시께 여성활동가 3명과 함께 미군부대를 다시 방문했다. 닫힌 정문에 앉아 평화적인 침묵시위를 했다. 1시간이 조금 지나자 탐조등을 비추며 방패와 곤봉으로 무장한 미군이 위압적 자세로 다가와 문을 열더니 나를 잡아챘다. 그리고 팔을 뒤틀며 뒤로 묶어 수갑을 채웠다. ‘왜 신부님을 연행하느냐’고 항의하는 여성 두 명도 뒤로 수갑을 채워 알 수 없는 곳으로 끌고 갔다. 빈 책상 하나 놓여 있는 골방에서 굳이라도 읊을 듯 고무장갑을 끼고 온몸을 수색하더니, 군인 여러 명이 카메라캠코더를 들고

와 찍어낸다. 같이 연행된 여성은 폭행을 당해 팔과 다리에 피멍이 들었다. 1시간 뒤 한국 경찰이 나타났다. 수갑을 찬 채 군산경찰서로 호송돼 새벽 2시에 풀려났다. 우리 경찰은 미군의 시녀나 마찬가지로였다. 분노가 치밀었다. 한국 땅에서, 그것도 한국경찰이 보는 앞에서 미군에 의해 뒤로 결박돼 1시간 이상 수갑을 차고 강제 구금돼 있다니. 그들에게 당한 모욕감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온몸에 전율이 흐른다.

이제 다시 물어야 한다. ‘미국은 우리에게 누구인가?’ 내 나이 환갑이 넘었다. 앞으로 얼마를 살지 모르나, ‘미군은 이 땅에서 철수하라’고 절규하며 명동성당에서 투신한 나의 제자 조성만 열사를 생각한다.

그리고 이 글을 읽은 한 독자는 “제나라 백성들이 제나라 땅에서 남의 군대에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이 미군으로 하여금 저리도 안하무인으로 행동하게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제나라 국민을, 그것도 제나라 땅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결코 제대로 된 정부라 할 수 없다”고(한겨레 99.8.21)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 3) 각종 피해 사례

주한미군 주둔에서 비롯되는 환경오염, 사유재산권 침해, 도시발전 저해, 훈련장 소음 등 각종 피해가 산적해 있는데 몇 가지 대표적 사례들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 **환경오염 문제** : 미군기지 주변 토양은 미군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로 인한 피해와 기름 오염 정도가 심각하다. 1992년 반환된 3군데 미군 유류저장창고는 일반 지역보다 납의 함유량이 최고 24배, 카드뮴은 7배나 오염되어 있었다고 한다.

- **사유재산권 침해** : ‘자기 땅에 건물을 지었다가 미군 공여지라는 이유로 철거 명령을 받고 벌금까지 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땅이 미군 공여지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토지소유자에 대한 통보와 협의 절차 없이 미군과 국방부가 임의로 공여지를 지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한 푼의 보상도 하지 않은 채 토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공여지로 징발된 토지를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군사적 필요성’이 사라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판단과 반환의 결정권은 고스란히 미군측이 가지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미군측에 넘겨진 공여지도 ‘미군이 이미 사용중인 시설과 구역은 합의를 통해 넘겨받은 것으로 본다’는 ‘한국주둔군지위협정’의 규정 때문에 미

군의 사용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 **도시발전 저해** : 우리는 1996년 서울시가 새 청사를 용산기지 이적지에 신축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뒤 1997년 7월 용산을 새 청사 터로 사실상 확정하고도 주한미군측의 반대로 수포로 돌아갔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동작대교는 개통한 지 15년이 됐지만 아직도 용산 미군기지로 말미암아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동작대교는 기본설계 단계에서 용산 미8군 기지를 통과하여 도심과 직결되게끔 되어 있었다. 그러나 주한미군 당국의 ‘승낙’을 얻지 못하여 무산되고 말았는데, 그 결과 다리 북쪽 끝 부분에 입체교차로 시설도 하지 못하고 다리 끝부분을 잘라놓은 채 동부이촌동에서 제3한강교 쪽으로 2차선의 셋길만 만들어 놓고 있어, 다리를 건너 시내 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이 부분에서 심한 병목현상을 빚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미군의 주둔은 합리적인 국토이용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 **미군 훈련 피해** :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 주한미군 제7공군 51전투비행단 소속 사격장의 경우 로켓포, 기관포, 기총, 레이저포 사격이 포함되고 연중 5, 6회에 걸쳐 원폭투하 훈련이 실시된다고 한다. 그리고 연중 계속하여 매주 월요일~금요일 까지 연간 약 250일에 걸쳐 시행되는데, 연습은 1일 평균 11.5시간 동안 편대로 15분 내지 30분 간격으로 행해지고 사격횟수는 1일 600회 내지 700회에 달한다고 한다. 격주간으로 월요일~금요일까지 주간훈련과 주간 및 야간훈련이 실시되고 주간훈련의 경우에는 09:00부터 훈련이 시작되고, 야간훈련이 있는 날은 통상 12:30부터 23:00까지 사격연습이 계속된다. 팀스피리트 훈련 등 연중 4,5회의 특별한 훈련기간 중에는 24시간 계속하여 사격연습이 행해지며, 이로 말미암아 주변 8개 마을 713가구 4천여 명의 주민들은 극심한 소음피해와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폭사고로 인한 생명의 위협, 그리고 사격장 조성 당시 연안 황금어장과 농경지 및 임야를 헐값에 징발 당함으로써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한다. 이 같은 주민 피해는 그 외의 미군사격훈련장에서도 엇비슷하게 발생하는 일이다.

#### 4) 남북통일대화의 걸림돌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남북대화 과정에서도 커다란 걸림돌로 되고 있다. 1970년대 초 시작된 남북대화 이후 대화가 중단되거나 또는 지지부진하는 데에는 늘 ‘팀스피리트한미합동군사훈련’ 이나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3월 말 이탈리아의 방북대표단을 접견하는 자리에서도 북측은 남



북대화가 재개되기 위해서는 먼저 남측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주한미군을 철수 시켜야만 가능하다고 했다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북측은 남과 북이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촉진시켜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정치·군사적인 문제부터 접근해 가야 하고, 남북 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긴장상태의 완화를 위해서는 남과 북은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중지해야 하고 남북이 각각 군대 감축 및 군비를 대폭 축소하여야 하며, 외국으로부터 일체의 무기와 작전장비 및 군수물자의 반입을 중지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미군의 철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한의 군사 작전권까지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 주한미군의 철수 없이는 남북대화에서 어떤 현안 문제를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합의사항의 실천이 불가능하고 의미도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남측은 미군의 주둔을 움직일 수 없는 절대 영역으로 굳혀 놓은 상태에서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현안문제들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이와 같이 미군의 남한 주둔은 남북대화에서도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금 각종 형태의 남북대화가 절실한 정치적 현안 문제로 등장하고 있지만 앞으로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가 타결되지 않는 한 남북대화의 성사는 어려울 것이고, 설혹 절차적인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통일을 향한 전진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는 힘들 것이다.

### 3.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주한미군 문제는 국가주권 침해 문제와 직결되어 있고, 인권을 비롯한 각종 주민피해가 극심하며, 남북대화의 걸림돌로 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 당국은 ‘한국주둔군지위협정’과 같은 불평등 조약들을 내세워 온갖 특혜조치를 취하고 있을 뿐 당해 주민의 정신적 아픔과 물질적 피해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한미군측과 한편이 되어 왔다. 그리고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에서조차 주한미군 문제가 논의되지 않고 있다. 오직 제헌국회 당시인 1948년 10월, 40여 명 의원들의 발의로 외국군철폐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을 뿐 그 뒤로는 단 한 번도 국회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다. 한국과 같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필리핀에서는 상원에서 “필리핀에 있는 외국군 기지들을 1991년 이후에도 존속시키는 어떤 협정에도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시킴으로

써 미군기지 철수를 기정사실화했던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국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라는 울분의 토로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통일운동 차원에서는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해 왔던가?

4.19시기 통일운동 과정에서 민족자주 문제와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제기했었고, 80년대 초에는 청년학생들이 부산 문화원에 불을 지르며 저항했었고, 서울 미문화원을 점거하고 농성을 했었다. 또한 80년대 통일운동 과정에서 민족자주와 미군철수를 외치며 활복 투신한 열혈 학생들도 있었다. 그리고 90년대에 이르러서는 주한미군 피해와 관련한 각종 대책위원회라든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와 같은 부문별 단체들이 꾸려져 나름대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서울 용산구청장(성장현)이 미군부대 쪽이 영내에 불법으로 짓고 있는 지상 6층짜리 호텔과 지하 1층, 지상 1층짜리 주차장의 철거를 요구하면서 “만약 미군부대 쪽이 호텔 건물의 불법 증개축과 관련해 긍정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부대 앞으로 불도저를 몰고 가 철거를 시도하겠다”(한겨레, 3. 25)고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통일운동가들과 단체들, 애국 청년학생들, 그리고 피해주민들이 민족자주화와 주한미군의 피해 문제를 제기하고 미군의 철수를 주장해 왔다. 그리고 마침내는 지방자치단체장까지 미군부대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물리적 대응을 다짐하기에까지 이르러 있다.

#### 4. 맺음말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주한미군 문제는 곧 민족자주권과도 직결되어 있는 통일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주한미군 문제는 민족자주권을 확보하는 통일운동의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는 한 해결의 정당한 접점을 찾기는 힘들다. 이와 같이 생각할 때 주한미군 문제의 보다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두 가지 방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정부 당국이 고려할 수 있는 남북공조를 통한 주한미군 문제의 해결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한미군의 온갖 횡포, 그들에게 주어지는 한국 정부의 특혜,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주민 피해와 국가적 손실, 또한 민족적 자존심의 상처 등 이 같은 문제들을 이제 더 이상 얼버무리고 넘어갈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있다. 이미 ‘과연 누구를 위한 주한미군이나?’는 범시민적 비난이 상당한 속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재 한국정부 단독으로는 주한미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의지나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때 방법은 오직 하나, 남북공조를 통한 해결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의 있는 자세로 남북공조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금까지의 남북관계에서 한 번도 그 같은 예가 없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남측의 결심 여하에 따라서는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북측은 이미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92.2.19) 때 당시 북측대표단장이 ‘정신대 문제’ 및 일본의 핵 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남북 쌍방이 시급히 공동대책을 협의하고 쌍방당국의 공동결의안을 채택하자는 제의를 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다음, 통일운동의 내용과 관련한 문제이다.

미군주둔에서 비롯되는 인권침해, 환경오염, 사격장 및 비행장의 소음공해, 재산권 손실 등 각종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아내고, 또 ‘한국주둔군지위협정’의 개정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주한미군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으로서의 통일운동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같은 피해보상을 위한 법개정운동이 성과를 거두려면 미군주둔 문제의 원천적 해결을 위한 통일운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한 통일운동의 내용은 남북 양 정권의 남북공조를 촉진하는 운동이어야만 할 것이다.

사월혁명회보 제56호(2000.4)